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0월 24일

행 정 재 무 위 원 회

##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 강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17. 10. 16)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

- 가.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 삭제 및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부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구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실질적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2013. 5. 28.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시장의 구역을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 관리 및 설치기준을 규정(안 제3조~제4조)
- 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임시시장의 관리 규정(안 제5조~제6조)
- 라.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시 처리 기간(14일)을 규정(안 제7조)
- 마. 재정 지원의 근거를 규정(안 제8조)
- 바. 시설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9조)
- 사. 본 조례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에 관해 규정(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8. 23. ~ 2017. 9. 12.) 결과 : 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규제 심사대상 미해당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강희순)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6.12.31일자로 만료되어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 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구역 등 규정을

- 나.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 관리 및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

- 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상권활성화구역 및 임시시장의 관리를 규정하였고

- 라. 안 제7조는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 및 처리 기한 (14일 이내)을 규정하고

- 마. 안 제8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바. 안 제9조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 사. 안 제12조는 본 조례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두는 조문규정 마련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과 중복조항 삭제 및 상인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의무부과 조항 등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실질적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략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붙임 관계법령 1부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

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6.8.]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5.2.3., 2016.12.2.>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 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법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7.26., 타법개정]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군·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④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⑥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11., 2016.9.29., 2017.7.26.>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